

#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황진태\* · 박배균\*\*

## Seeing the State-nature Relation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logy

Jin-Tae Hwang\* · Bae-Gyoon Park\*\*

**요약 :** 본 논문은 국가와 자연이 각각 독립적이고,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하는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차용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을 관계적, 과정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사회과학에서의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대안적인 관점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어 :** 국가-자연 관계, 정치생태학, 자연의 사회적 구성, 발전주의 국가, 국가론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mplexities of the state-nature relations in Korea by emphasizing the complex processe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In doing so, it relies on the literature of “political ecology of state-nature” which problematizes the conventional modernist views on nature assuming the dualistic separation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First, we critically review the existing Korean literature on the state-nature relation (e.g., the ecogism, the metabolic rift theory,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nature, the green state thesis, etc.) and argue that these studies significantly lack the recognition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Second, we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seeing the state-nature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logy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tate-nature relation. Last, we conclude that the political ecology approach to the state-nature can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Korean capitalist development.

**Key Words :** state-nature relation, political ecology,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developmental state, state theory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고(NRF-2011-330-B00209), 또한 독일연구재단(DFG)의 재원으로 TERRECO(Complex TERRain and ECOlogical Heterogene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됨.

\* 독일 바이로이트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Bayreuth), jintae.hwang@uni-bayreuth.de

\*\* 서울대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pbg@snu.ac.kr

## 1. 서론

오늘날 주류 사회과학과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담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국가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Ohmae, 1999; 김상철·이윤섭·옴김, 2005).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을 둔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 간에 형성되는 긴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한편, 최근 십 수 년 동안 인문지리학에서는 세계화가 국가를 약화시킨다는 주류 사회과학의 일면적 이해를 의문시하는 여러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국가의 개방정책, 분권화,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국가의 역할이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공간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Brenner and Theodore, 2002; Park, 2005; Kythreotis, 2012).

본 연구는 선행된 인문지리학의 문제의식을 따라서 정치생태학 연구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간적이고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생태학은 자연<sup>1)</sup>현상(홍수, 가뭄, 기후변화 등)을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자연의 이분법적 인식론이 팽배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사회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한다(권상철 옴김, 2008; 김숙진, 2010). 하지만 정치생태학자 폴 로빈스가 지적하듯이 지금까지의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이론화와 사례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Robbins,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몇 인문지리학자들은 국가-자연 관계(state-nature relations)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Whitehead *et al.* (2007)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가 각각 독립적이며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와 자연은 겹으

로 보기에는 각각 정적인 사물(static object)들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국가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서로 깊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구체적이며 이질적인 것들의 복잡성이 “국가” 혹은 “자연”으로 추상화되어 단일한 실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을 관계적이고, 과정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신고전경제학과는 달리 발전주의 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sis)은 6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높은 경제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본과 시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Johnson, 1982; Wade, 1990; Woo-Cummings, 1999). 발전주의 국가론은 신고전경제학적 시각과 다른 대안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문적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발전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맹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 것으로 바라본다(박배균, 2012, 53-56). 국가와 사회를 분리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베버주의 국가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국가론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관료는 사회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었고, 계획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가를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행위와 정책이 사실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상호작용과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둘째, 앞서 지적한 국가와 사회를 분리된 것으로 보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발전국가론은 국가와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이해한다. 발전국가론은 자연을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면서 발전국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인 자연을 가치창출을 위한 ‘자원(resource)’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적, 담론적

전략들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세력들 간에 복잡한 갈등과 경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주의 국가론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여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생태-환경적 이해를 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국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원자력 발전소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는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간과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사회과학에서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기존 연구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연구의 국내적 함의와 전망을 간략히 제시한다.

## 2. 국내 사회과학에서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

현재 환경의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국내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실천적 입장들이 혼재된 상황이다(이상현, 2011). 기존 논의는 크게 국가를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국가를 실천의 측면에서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주의 안에서도 국가에 대한 미묘하게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하며, 국가를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타도를 지향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기도 해서 이들 논의의 위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최

병두, 2001, 125-130; 2009, 11-13; 황진태, 2012a, 170-173). 이러한 복잡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어떠한 이론적 시사점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어 기존 논의를 정리하였다.<sup>2)</sup>

### 1) 생태주의

생태주의(ecologism)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에 의하여 누리게 된 물질적 풍요와 이러한 풍요로부터 비롯된 환경문제를 초래한 규범과 실천에 도전하는 이데올로기다. 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환경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정용화 옮김, 1994; 한면희, 2008; 이상현, 2011). 생태주의는 기후변화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가 자연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정치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이상현, 2011, 16).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먼저 출현했지만, 한국사회에서도 1980년대 자생적인 생태담론과 1990년대 들어서 해외로부터 다양한 생태담론들이 유입되고, 환경운동단체들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김지하, 1992; 1996; 문순홍, 2006a;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김종철, 2008; 한면희, 2008). 특히, 1989년부터 소비자협동조합의 맹아인 한살림모임에서 시작한 유기농산물 직거래에 바탕한 생활공동체운동과 1991년부터 김종철이 주도한 <녹색평론>의 발행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태주의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생태주의 논의가 주는 함의는 생태주의가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환경문제를 비롯한 현대기술문명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단위로 로컬한 공동체(community)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국내 생태주의 담론을 주도한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화를 보자.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건의 소유와 권력의 확대를 위한 이해(利害)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지배하는 삶, 다시 말해서 경쟁과 투쟁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부조와 보살핌이

주된 삶의 원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다”(김종철, 2008, 167).

김종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자본과 국가에 의해 국가주의가 장려되면서 회자된 공동체 개념은 “진정한 공동체”(김종철, 2008, 166)가 아니라면서 공동체는 자본주의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고, 국가 영토성을 고취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다른 글에서 김종철은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데,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결합하여 전개되어온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는 바깥으로든 안으로든 자연세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민주의적 지배, 억압, 착취를 계속하지 않고는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체제”(김종철, 2008, 202)라면서 자본주의와 결합된 근대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포함한 자연세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생활**을 창조적으로 복구하는 [것이다].”(김종철, 2008, 21 굵은 체는 인용자 주).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공동체란 면대면 교류가 가능한 국지적 수준의 비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김종철은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문화이며, 이것의 해결책은 “농적인 질서”를 회복한 “농촌공동체의 재건”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간의 예는 농촌에 존재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김종철, 2008, 49). 물론, 김종철이 지칭한 공동체는 농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녹색평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통화의 대안적 화폐로서 지역통화(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S)를 공동체의 예로 소개한바 있다(마루야마 마코토, 1996; 니시베 마코토, 2002). 또한 생태공동체 논자들 중에는 생태공동체를 농촌공동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사회

의 상황에 맞춰서 도시에서도 생태적 도시공동체 형성이 가능함을 제안하고 있다(이근행, 2001; 정규호, 2002). 정리하면, 지리적 스케일(scale)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태주의에서 언급하는 공동체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 스케일을 지양하고,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와는 달리 호혜성에 기반한 대안적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간적인 규모”(정규호, 2002, 111)의 로컬한 스케일인 것이다.

이처럼 생태주의 논의가 대안적 공간으로 로컬한 스케일을 지향하는 것은 무정부주의(anarchism)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기원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방해하는 어떤 형태의 권위에도 반(反)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한다(Whitehead *et al.*, 2007). 이러한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무정부주의자들은 근대국가의 부상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국가적으로 통합된 산업과 농업체제가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절단을 초래했기 때문에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탈중앙집중화를 통하여 사회를 자족적인 꼬민(commune)들의 연방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백용식 옮김, 2009). 국내 생태주의 논의도 이러한 초기 무정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생태주의 논의에서는 국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서유석 옮김, 2012; 송태욱 옮김, 2005)이 일부 소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태주의는 국가에 대한 존재를 배격하는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를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sup>3)</sup> 또한 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공간이 만들어낸 소비와 생산 영역의 분리에 대한 분석을 외면하게 되면서 본래 생태주의가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상상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예컨대, 대안적 경제공간으로 간주되는 국내 생활협동조합들은 주로 소비의 과정(소비자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생산 과정(생산자협동조합)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인다(황진태, 2012, 86-88; 김민정, 2010, 250-251, 254-257).

정리하면, 생태주의는 자본주의와 근대화, 과학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 과정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급진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태주의는 국가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연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신성한 자연이라고 간주하는 사회-자연의 이분법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사회/국가와 자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Whitehead *et al.*, 2007; 진중현, 2009, 152).

## 2) 신진대사 균열론

생태맑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매개로 하여 만들어지는 사회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유물론적으로 분석한다(이범웅 옮김, 2010). 특히, 생태맑스주의자들 중에서는 정치경제학 내부에서 회자되었던 맑스가 자연을 간과했다는 비판(최병두, 2001 참조)에 대하여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metabolic rift)론을 통하여 반박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농촌은 식량을 도시에 공급할 때 토양의 영양물질들(질소, 인, 칼륨)이 도시로 옮겨지더라도 대량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지 않았고, 농촌에서도 도시로 식량이 이동하면서 사라진 영양물질들이 자체적으로 충족이 가능한 순환 체계였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초래된 식량의 대량 생산방식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영양물질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농촌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토양의 자연적 비옥함이 떨어지고, 도시에서 급증한 영양물질들은 폐기물로 축적되면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게 됐는데 이를 자연과 사회 간의 신진대사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생태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초기의 도시와 농촌 간의 신진대사 균열의 관점을 오늘날 자원이 탈취되는 남반구와 낭비적 소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북반구로 확대 적용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의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신진대사 균열론의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Clark and York, 2003; Foster *et al.*, 2009; 김철규·엄은희·오수길·윤순진 옮김, 2009; 황진태, 2009, 315).

신진대사 균열론은 자연과 사회의 물질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본주의가 신진대사 균열을 야기하여 필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명확성 덕분에 국내에서도 관련 서적들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고(김현구 옮김, 2001; 추선영 옮김, 2007; 박종일·박선영 옮김, 2008; 박미선 옮김, 2008; 이범웅 옮김, 2010; 박종일 옮김 2010; 황정규 옮김, 2012),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윤종희·박상현, 2006; 권정임, 2008; 김철규·이지웅, 2009; 김민정, 2012).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예로 김철규·이지웅(2009)은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혁명과 근대적 농업을 한국의 신진대사 균열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의해 파괴된 신진대사를 복원하는 대안적 시도의 한 예로 팔당지역에서 시작된 유기농 생산자 공동체를 들었다.

그런데 김철규·이지웅(2009)의 연구는 신진대사의 균열을 심화시킨 행위자를 국가로 보았지만, 정작 국가에 대한 분석은 신진대사 균열론이 아닌 다른 이론 틀에 의존하였다. 혹자는 사례연구의 특성상 추상 수준이 구체적이게 되면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끌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신진대사 균열론이 국가에 대한 이해가 협소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생태맑스주의자들은 국가를 비롯한 제도들의 근대화를 통하여 환경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생태근대화론에 대하여 나름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실제 국가는 환경위기를 극복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York and Rosa, 2003, 276). 가령, 142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자유화, 시민의 자유, 국가 주도의 환경주의(state environmentalism)를 요인으로 삼아 통계를 돌린 결과 이들 요인들이 지속가능성과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York *et al.*, 2003). 이처럼 양적(量的)인 기법의 사용과 더불어 이론적으로도 신진대사 균열론은 국가는 자본축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결정론적인 맑스주의 국가론을 차용함으로써 국가와 자연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Clark and York: 2005; York and Rosa, 2003). 그

리하여 생태맑스주의의 대안은 생태주의자들과 유사하게 “부의 축적(자본)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고자 말겠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요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창조**”(박종일 옮김, 2010, 360 굵은 체는 인용자 주)에 머물고, 국가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대되지는 못한다. 이는 김철규·이지웅(2009)이 신진대사 균열을 막을 대안으로서 유기농 생산자 공동체에 주목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신진대사 균열론은 사회와 자연 간에 이동하는 물질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생태주의에 비하여 사회와 자연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시도가 국가와 자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것으로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 3) 자연에 대한 지리학의 최근 논의들

앞서 살펴본 생태주의와 신진대사 균열론은 인식론적으로 사회와 자연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이해하고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와 자연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이론화가 빈약하다. 최근 해외 비판적 지리학계의 흐름을 좇아 국내 지리학에서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nature)과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등의 접근들을 통하여 앞선 논의들의 맹점들에 대한 보완이 시도되고 있다.

#### (1)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자연을 사회로부터 독립되고, 신성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연-사회의 이분법을 문제시하면서 자연은 사회, 과학기술, 종교, 제도,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Eder, 1996; Swyngedouw, 2005; 이상현, 2001; 2002). 방법론적으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어떤 자연이 실재(reality)가 되는 것은 사회적 해석활동과 의미부여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담론 및 경관분석을 중시한다

(이상현, 2001; 진종현, 2009). 가령, 진종현(2005)은 금강산 관광을 사례로 순수한 자연으로서의 금강산이 어떻게 민족주의의 순수함의 상징(“통일국토”) 또는 북한 사회주의와 남한 자본주의 간의 이념경합의 장으로서 생산되는 지를 밝혔다. 이상현(2001)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사례로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물은 경제재(“수자원”) 혹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생명의 젓줄”로 다양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술하겠지만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국가-자연 관계의 정치생태학이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해외 및 국내 지리학계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으로 (포스트) 마르크스 지리학을 배경으로 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나 라투르 등의 영향을 받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로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 (2)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카스트리(Castree, 2008a; 2008b)와 베커(Bakker, 2010)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기존의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이 지식과 담론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과 사회 간의 물질적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최병두, 2009: 32)를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물질성에 대한 강조는 신진대사 균열론에서도 강조된 바 있지만 신진대사 균열론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연구와 비교할 때 사회와 자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칼날이 무디다.<sup>4)</sup> 여기서 주목할 지리학 논의는 닐 스미스의 “자본 축적 전략으로서 자연” 테제에서 제기된 자연에 대한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개념이다(Smith, 2006). 형식적 포섭이 석탄, 석유 등의 자연 자원의 채굴을 증가시킴으로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양적 전략이라면, 실질적 포섭은 (부분적으로는 형식적 포섭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유전자조작식품, 대체에너지 개발(가령, 석탄액화기술, 조력에너지)과 같은 질적 전략을 일컫는다. 특히, 신진대사 균열론과 비교할 때

실질적 포섭 개념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크다. 신진대사 균열론을 비롯한 생태맑스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생태위기를 악화시키고, 국가와 자본이 생태위기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단일한 시나리오를 전제한다(최병두, 2009, 43). 반면에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자본이 자연을 파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을 상품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자본과 자연 간의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밝혔다라는 의의가 있다(Castree, 2008a). 국내연구로 최병두(2010)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 전략을 에너지 정책의 신자유주의화(예컨대, 태양광, 조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사업과 녹색펀드와 같은 에너지의 금융화)로 분석하였다. 이상현(2009, 35)도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기후”라는 자연에 대한 자본의 (금융화에 기반한-인용자 주) 의제적 포섭전략”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국내 지리학자들이 필리핀의 광업산업과 인도네시아 산림전용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을 사례로 해외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엄은희, 2008; 황성원, 2010).

최근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지역이라는 구체적이고, 맥락특수적인 공간과 맞물리면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로서 다양하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면서(Castree, 2008b; Bakker, 2010), 신자유주의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국가에 대한 이론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를 주도한 카스트리는 스미스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환경적 조정(environmental fix) 개념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조정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자연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전략, 둘째,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를 탈규제화하는 전략, 셋째, 자연을 적극적으로 퇴락시켜 이윤을 얻는 전략, 넷째, 기존의 국가가 맡았던 자연보호 등의 책임과 역할을 시민사회나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다(Castree, 2008a, 146-150; 최병두, 2010,

33). 이 유형화는 몇 가지 문제를 지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네 가지 환경적 조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본의 논리이고, 네 번째는 국가의 논리로 나누어서 배치하여 마치 자본의 논리와 국가의 논리가 별개로 작동하여, 자본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적 조정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가 맡고 있던 책임들을 민간영역과 시민사회로 덜어내기(off-loading)와 최소국가(minimal state)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sup>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존재하는 자본 논리와 국가 논리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무시될 수 있다. 또한 카스트리가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roll-up) 되는 과정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경험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와 같은 특성의 역사적, 제도적 유산 하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환경적 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의 신자유주의 논의는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 (3) 행위자-연결망 이론

서구 지리학계에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을 통하여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이 논의가 갖고 있는 인식론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연-사회의 변증법적 관계가 밀접한 내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변증법적 관계 자체가 분리된 두 영역을 기초로 가능”했다는 문제제기가 중요하다(김숙진, 2010, 469).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몇 인문지리학자들은 과학기술사회학에서 라투르가 진전시킨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수용한다(Castree, 1995).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깨기 위하여 관계적 존재론을 수용한다. 관계적 존재론이란 자연과 사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개체와 주체, 행위자와 구조 등의 이분법의 해체를 지향하고, 대안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비인간인 자연도 인간과 구조

적 차이가 없는 하나의 행위소(actant)로서 상호 연결되며, 특정한 과학적 사실은 인간과 비인간에 의해 공동으로 생산되는 관계적 효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김숙진, 2010, 470). 국내서는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관련된 서적 일부가 번역 및 소개되었고(홍철기 옮김, 2009; 이세진 옮김, 2012; 김환석, 2006; 홍성욱 역음, 2010), 환경사회학과 정치학에서 관련 연구가 시도되었다(심하나, 2010; 홍민, 2011; 박효진, 2012).

국내 연구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심하나(2010)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사례로 천성산 갈등을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가 공존하는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비인간 행위자로서 도롱뇽을 이해하고, 도롱뇽이 어떻게 터널 반대운동을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 다른 우발적 결과들을 초래했는지를 살폈다. 심하나(2010)의 연구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장점인 비인간 행위자 드러내기를 통하여 그동안 환경운동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객체로 간주되던 동물(도롱뇽)에게 감성적, 윤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는 반대운동과 관련한 인간 행위자들(법원, 전문가, 환경운동가, 종교인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도롱뇽을 제외한 고산습지, 지하수 등의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의 역할과 이것들과 인간 행위자와 맺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공간을 매개로 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에 주목하는 지리학 연구들로 보완될 수 있다. 김숙진(2006)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청계천 복원은 수문과 토목 기술의 발전(가령, 전기모터와 대형변압기), 도심 저지대에 위치한 청계천 지역에서 치수의 필요성, 서울시와 언론, 전문가들의 청계천 복원 담론의 생산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에 의한 결과로 가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김나형(2013)은 2008년 동절기에 태백시에서 발생한 단수 및 제한급수 사태가 가뭄이라는 기상조건뿐만 아니라 노후한 상수도관, 산업 변화(탄광산업에서 관광산업), 인구변화(거주자의 감소와 관광객의 증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대,

석회암 지대라는 토양특성 등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다각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어떠한 자연생태계(청계천, 천성산 등)는 순수한 자연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자연과 사회의 혼종물(hybrid)이며, 가뭄과 같은 특정한 자연현상은 기상조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의 다각적 작용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뒤에서 살펴볼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자연의 이분법과 유사하게 국가와 자연의 관계도 상호 분리되고,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국가의 권력은 권력의 복잡한 연결망 내에서 자연을 기입(enrolment)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Whitehead *et al.*, 2007, 52). 즉,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국가와 자연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식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적 존재론에 근거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분법적 인식을 해체하고, 구조적 차이를 없애려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다른 행위자들과 차별적인 위계적 기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마저도 연결망 속 여러 행위자들 중의 하나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Whitehead *et al.*, 2007, 53). 이는 국가가 자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앙집중화, 영역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간전략들을 논의할 여지를 사라지게 하는 이론적 딜레마를 노출하게 된다. 김숙진(2006, 117)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이 위계적 차이들을 간과했다는 맑스주의 지리학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단지 권력이 네트워크상에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뿐”이라면서 행위자들 중에서 특정 행위자가 더 큰 권력을 갖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나아가 “이종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세상을 평평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안적인 경제, 정치적 관계를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의 잠재성을 타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며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옹호한다. 여기서 상이한 인식론과 존재론에 기반한 이론들을 통합 내지 절충을 시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제다. 하지만 김숙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사회-생태 연결망 안에 위치시켜서 보다 “이종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네트워크들의 노드(node) 혹은 집합들은 국가의 위계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행위자-연결망 관점에서 설명하더라도, 그 연결망의 특정 국면은 국가의 위계성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근대국가에 의해 생산된 국가-자연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효과”로 간주한다면, 다른 자연들(가령, 지역의 자연(local nature))을 상상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 4) 국가론: 녹색국가론, 토건국가론

국내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국가론과 토건국가론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먼저, 녹색국가론을 살펴보자. 국내에서 녹색국가론은 문순홍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바람과물연구소 편, 2002; 문순홍, 2006b; 문순홍 편, 2006a; 2006b). 문순홍에 따르면 녹색국가론이 시작된 구조적 배경은 “70년대 생태패러다임의 시대가 천명된 이후 생태친화적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들이 다윈류의 자연해석에 대한 거부, 생태(학)적 자연해석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자유 및 자율성 확장, 그리고 이에 터한 국가의 축소를 추구”(2002a, 6 굵은 체는 인용자주)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녹색국가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다. 조명래는 국가론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론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권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을 매개로 한 세계 전체에 대한 지배의 원리와 기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담론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 인간 중심적이며 반생명적, 반녹색적”(조명래, 2006, 206)이었기 때문에 ‘국가론의 녹색화’를 녹색사회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녹색국가의 정의는 최소정의와 최대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최소정의로서는 국가 내부의 환경

친화성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며, 최대정의로서는 녹색의 가치가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확산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녹색화의 수준에 따라 강한 녹색국가와 약한 녹색국가<sup>6)</sup>로 구분할 수 있다(문순홍, 2002b, 262, 285-286; 조명래, 2006, 220). 녹색국가론 연구는 크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시계열적인 배열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날의 한국 국가형태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토지정책, 발전국가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등을 분석하는 과거 부분(문순홍 편, 2006a)과 이러한 국가형태의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산업정책, 토지정책, 행정체제, 시민사회까지 녹색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는 미래부분으로 구성된다(문순홍 편, 2006b). 녹색국가론은 국가의 축소를 강조하는 세계화 담론에 편승하지 않고, 생태주의나 신진대사론과 달리 국가가 필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자로 보지 않으며, 국가가 녹색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될 가능성과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국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녹색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보인다. 첫째, 녹색국가론은 기존의 다양한 국가론(베버주의 국가론, 전략관계적 국가론 등)에 대한 논의들을 언급하지만 환경관리자(environment manager)로서 국가관료 및 제도들의 역할(즉, 최소정의로서의 녹색국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을 간과하는 베버주의 국가론적인 입장을 띠는 점이다. 둘째, 국가-자연의 이분법적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첫 번째 한계와 연관되어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면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도 간과되었다. 즉, 앞서 검토한 생태주의자들이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인식했지만, 역설적으로 자연을 사회로부터 독립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연-사회 이분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기 국가가 자연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었다는 일면적 해석으로 연결시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건국가론을 살펴보자. 토건국가는 본

래 일본을 사례로 발전된 개념인데, “도로, 댐 등을 만드는 건설회사와 유착된 정치권, 정부관료들에 의하여 국가경제에서 토건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다(황진태, 2013, 317). 이 개념은 한국에도 유용하게 적용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토건지향적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홍성태 엮음, 2005; 박배균, 2009). 하지만 토건국가론도 녹색국가론과 유사하게 박정희 정권 시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일방적으로 자원획득을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국가와 자연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토건국가 논의를 주도한 홍성태는 토건국가를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하여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국가”(홍성태 엮음, 2005, 22 굵은 체는 인용자 주)라고 정의하여 국가와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끝으로 녹색국가론과 토건국가론에 앞서 연구된 최병두(199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축적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환경과의 관계도 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조건으로서의 자연과 국민에게 제공될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 간의 긴장관계 안에서 인식하였다(최병두, 1999, 129 그림 1 참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역대 국토개발정책을 살피면서 국가가 자본축적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개발계획들을 세웠고, 계획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담론화했음을 지적했다(최병두, 1999, 144). 이는 3장에서 살펴볼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와 유사하다. 하지만 사례연구에서는 자연은 국가가 초래한 “환경문제”로만 환원되면서 어떻게 국가는 축적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헤게모니 전략의 측면이 자연과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 5) 요약

2장에서는 기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어왔었던 사회와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들 논의에서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존 논의에서 국가에 대한 이론화가 부족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일부 생태주의와 신진대사 균열론처럼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입장이 강하여 국가를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학에서 진행 중인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유용한 함의들을 담고 있지만, 본격적인 국가-자연 관계를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녹색국가론과 토건국가론은 생태연구에 있어서 국가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의의는 있지만, 국가-자연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국가-자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 3.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이해

기본적으로 국가-자연 관계(state-nature relations) 논의는 앞서 언급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에 마크 화이트헤드(Mark Whitehead)를 필두로 한 일단의 인문지리학자들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기존 연구가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국가론을 받아들여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Whitehead *et al.*, 2007). 크게 보면 국가는 자연에 대비되는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지만, 국가는 기업, 시민사회, 소비자,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여타의 다른 사회의 행위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

고 있다. 특히, 국경을 뛰어넘는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이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적 통합체로서 기능하고, 개별 기업, 시민단체, 개인들의 역량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바라보기 보다는 영역적 통합체라는 국가의 특수성에 좀 더 집중하면서 국가의 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자연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자연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좀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화이트헤드 외는 국가와 자연을 하이픈을 통해 연결하여 “국가-자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데, 여기서 “국가-자연”이란 국가에 의해서 자연이 본래 갖고 있었던 생태적 맥락이 제거됨으로서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을 의미한다(Whitehead *et al.*, 2007). 국가-자연은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의 행위자들이 기후, 물, 식생, 지형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담론적, 물질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자연이 특정 자본분과의 축적을 보장해주기 위한 축적전략 하에서 “수자원”으로 명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물의 이용과 개발이 담론적으로 규정되면서 물이 하나의 “국가-자연”으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자연의 담론적 구성과정은 국가-자연이 물질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이 “수자원”으로 규정되는 담론적 구성과정은 법과 제도화를 통해 국가가 하천의 개발을 위한 물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자연을 댐, 운하처럼 물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자연”을 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자연은 담론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국가-자연”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예로는 특정한 자연을 글로벌, 로컬 등과 같은 지리적 스케일은 배제한 채, 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만을 연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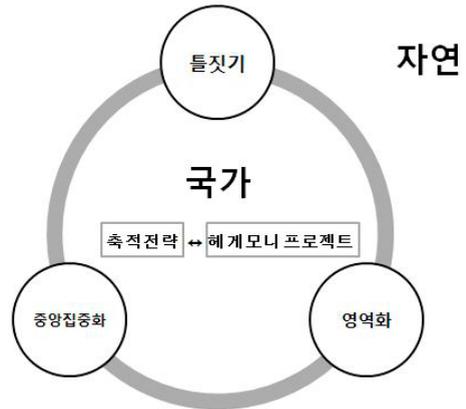


그림 1. 국가-자연 관계의 개념적 분석들  
출처: Whitehead *et al.* (2007, 14-17)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으로써 그 자연을 인식함에 있어서 특정한 지리적 상상(geographical imagination)을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한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제도나 기술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한라산을 제주도라는 로컬한 스케일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 스케일로 끌어올려진 지리적 상상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확립하려는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 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이라는 지리적 상상 속에 놓여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라산은 “국가-자연”의 담론적이고, 물질적 구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자연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국가는 초역사적인 개념이 아닌 근대국가(modern state)를 일컫는다. 근대국가는 뚜렷한 경계(국경)를 갖고 있는 영역적 통합체(Mann, 2003)인 반면에, 혈연, 인종, 문화적 동일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민족의 공간적 분포는 근대국가의 인위적 경계를 반드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민족과 근대국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가령, 이라크, 터키의 국경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쿠르드족). 자본주의의 출현과 궤를 함께하는 근대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었던 이질적인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켜야 하는데(윤형숙 옮김, 1991), 국가를 상징하는 특정 식물, 동물, 국

립공원, 경관(landscape)들은 일종의 “국가-자연”으로서 다양한 민족적 구성원들을 근대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자.<sup>7)</sup>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통해서 식물(소나무, 무궁화), 지형(동해물, 백두산, 남산, 삼천리, 강산), 자연현상(바람서리, 맑은 달) 등이 어떻게 국가적 정체성(우리나라, 우리 기상, 일편단심, 대한사람)으로 연결되는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자연의 생산은 국민들에게 선형적으로 무궁화는 국가적 상징으로 존재해왔던 것이라는 인식을 주입시키고, 근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대상들을 근대국가의 정체성과 연결된 추상화된 단일한 자연으로 대체하면서, 사회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균열과 긴장들(가령, 국민이 아닌 민족들, 국가적 자연이 아닌 다양한 맥락의 자연들이 근대국가의 사회화 과정과 빚어내는 긴장과 갈등들)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자연은 국민들에게 국민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통일성을 심어 주어 근대국가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자연”에서 국가와 자연 사이의 하이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다양한 공간적인 전략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는 이러한 전략들을 틀 짓기(framing),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영역화(territorialization)로 구분한다(Whitehead *et al.*, 2007, 14-16). 틀 짓기는 특정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물들을 하나의 틀 안으로 덮어버리는(bracketing off) 과정으로 중앙집중

화와 영역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구현된다. 중앙집중화는 국가가 수립하는 제도나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복잡한 실체인 자연을 표준화된 지식으로 통일하는 과정이다. 가령, 국가가 구축하는 수자원통계연보는 각 지역의 물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수자원”으로 틀 짓기 하는데 기여한다. 영역화는 앞서 언급한 중앙집중화를 위해 필요한 각 지역의 지식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국가가 주도한 GIS(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의 시각화 기술은 자연을 국가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상에서 공간적 형태, 위치로서 표시하여 국가-자연을 물상화하는데 기여한다. 더불어 영역화는 국가가 자연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와도 관련된다(Sack, 1986).

그런데 국가가 시도하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 중앙집중화, 영역화 등의 전략들은 베버주의적 국가론에서 이야기되듯 사회로부터 독립된 국가관료들이 수립하는 순수한 정치적 산물로 보아서도 안 되고, 맑스주의 국가론에서 제기되듯 자본의 이해관계가 국가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제적 산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밥 제습(Bob Jessop)은 이러한 경제결정론과 정치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적으로 국가를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경합하는 장(site)으로 이해하는 전략관계적 접근(strategic-relational approach)을 제시한다. 제습에 따르면, 국가형태(state form)(국가의 제도적 형태, 행정적 기능 등)는 자본의 축적전략에 조응하지만, 국가가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에 의해 필연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으며, 국가는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비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보장하고, 특정 축적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유범상·김문기 옮김, 2000). 즉,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한 정책, 전략들은 국가 안팎에서 작동하고 활동하는 사회세력들간의 정치적 경합에 따른 구체적이고, 우연적인 산물인 것이다. 국가-자연의 생산 또한 순수하게 정치적 혹은

은 경제적 논리로 환원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의 산물이며, 그러한 경합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국가-자연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생산된다.

화이트헤드를 중심으로 제시된 “국가-자연” 접근법은 국가론을 자연의 사회적 생산 논의와 접목시켜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다중스케일적 관점(박배균, 2012)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국가-자연”에 대한 개념화에서 스케일적 측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인다. 특히, 자연의 사회적 생산을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국가적 스케일보다 더 크거나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의 가능성과 이러한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간의 갈등, 경합, 타협이 이루어지는 다중스케일적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자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국가-자연”에 속하지 않는 자연들이 근대국가의 사회화 과정과 충돌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와 자연, 국가와 자연간의 복잡하고 다중적인 갈등과 긴장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국가-자연”에 대한 기존의 이론화가 지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국가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가 글로벌, 로컬 등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 과정과 갈등, 충돌, 연대하는 과정, 2) 글로벌, 국가, 로컬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정치-경제-문화적 과정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국가의 행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어, 국가에 의한 자연의 틀 짓기와 영역화 과정을 규정하는 과정, 3) “국가-자연”이 구성되는 이러한 다중스케일적 과정의 영향으로 국가의 공간적 행동과 전략 자체가 새로이 구성되는 과정 등에 대한 이론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자연”에 대한 이론화 시도가 서구 근대국가 형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근대국가 형성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근대화 및 근대국가 형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구의 경험에서 출발한 “국가-자연” 논의를 한국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연 연구는 한국과 같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경험한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사회적 생산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논의는 발전주의 국가론과 같은 이론적 자원에 의존하여 설명되던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자연-사회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4. 결론: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연구의 국내적 함의와 전망

서두에서 밝혔듯이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에 조응하여 자연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무런 갈등이나 긴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을 자원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물질적, 담론적인 공간전략을 필요로 한다. 가령, 어떤 지역의 강 유역에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지역 차원에서 수몰민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생기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경관(댐과 저수지 등)을 국가-자연으로서 틀 짓기(예컨대,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과 같은 지역의 강들을 전국적 스케일인 “4대강”으로서 규정하기)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하고, 대규모 댐의 건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가 자연을 중앙집권화하고, 영

역화하는 과정은 국가의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는 국가 만들기 과정이나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가 자연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진종헌(2007)은 전근대적 신성성의 대상이었고 풍수적 관념을 중심으로 인식되던 백두대간이란 자연이 근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근대적 영토의 일부로 재구성되는지를 고찰했다. 문화사회학자 주은우(2003)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미국을 사례로 미국의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자연풍경(가령, 프린티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살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문화연구의 차원에서 담론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시공간 맥락 속에서 국가의 축적전략(중화학 공업과 수출주도 산업화)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조국근대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국가가 자연의 생산에 개입한 과정과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연구는 국내에서 좀 더 심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강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을 자원으로 전환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한국에서는 “국가-자연”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정, 자연보호운동, 통일벼, 4대강 담론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국가-자연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연구는 발전의 시기(1960-80)에 발생한 사례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 국가가 주도하는 NGIS 구축,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자연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대규모 사회 인프라 건설사업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국가-자연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설명은 매우 의미미한 분석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지식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배경에는 이론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자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

안을 고민함에 있어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논의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들이 국가와 자연, 생태에 대한 국내의 기존 논의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논의들과의 적절한 협력과 공동작업이 국가-자연 논의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국가에 대한 이론화가 부족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담론전략의 분석이 부족한 녹색국가론과 공동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발전국가론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과 결합함으로써 국가-자연에 대한 논의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관련 분야의 간학문적 연구를 촉발하는 징검다리라 되길 기대해본다.

## 주

- 1) 필자들은 인류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1차 자연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자연은 인류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받은 2차 자연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와 자연 또는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를 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물질적이고 담론적으로 형성된 2차 자연에 주목한다.
- 2) 본 연구는 기존 생태주의를 비롯한 환경이론들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의 시각에서 환경이론지형에서 중요한 이론이더라도 본고에서는 누락될 수 있다. 또한 필자들이 선택한 기존 논의들은 이론의 추상수준(level of abstraction)에서 보자면 상호 간에 비슷한 수준에서의 이론들의 묶음으로 보기 힘들다. 예컨대, 생태주의와 대비되는 논의는 생태 맑스주의이지만, 본고에서는 생태 맑스주의의 하위 범주인 신진대사 균열론을 생태주의와 대등한 논의로 다뤘으며,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이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이 던지는 이론적 함의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사회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 대해 본고에서 이루어진 비판적 검토는 기존 논의들의 이론적 성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논의들 중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

- 한 부분들에 집중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비판적 생태연구 논의의 지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순홍(2006a), 드라이젝(2005), 이상현(2011), 문화/과학(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이러한 필자들의 문제의식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강연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병두의 토론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우리는 국가 권력의 물신성을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지만, 현재의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아무리 신랄한 비판을 한다고 해도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나름의 해결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프레시안 2009년 10월 16일자).
  - 4) 포스터를 비롯한 신진대사 균열론자들의 연구전개방식을 보면 이론 논의에서는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을 비판 없이 소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맑스의 말이 옳다”를 확인시키려는 교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표적으로 Clark and York(2005)를 보라). 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신진대사 균열론의 이론적 발전을 막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 5) 카스트리가 언급한 국가의 환경적 조정의 구체적 예는 케인지언 복지국가와 개발도상국, 이 두 가지 유형에 근거하고 있다.
  - 6)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론은 생태적 근대화론에 기반한 약한 녹색국가 유형으로 볼 수 있다(윤순진, 2009).
  - 7) 본 예시는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박주형 군이 제안해 준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상철 옮김, 2008, 정치생태학: 비판적 개론, 한울, 파주 (Robbins, Paul, 2004, *Political Ec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 권정인, 2008, “맑스의 사회주의론의 한계와 21세기 생태사회주의론: 생태문화의 창출과 확산문제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56, 15-41.
- 김나형, 2013, 태백시 물 공급의 지리학적 해석: 행위자-연결망 이론 적용,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0, “생태 공동체론과 대안 사회 논의,” 인문과학, 92, 241-265.
- 김민정, 2012, “물질대사 균열 관점에서 본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가축의 사육과 질병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8-39.
- 김상철 · 이윤섭 옮김, 2005, 세계는 평평하다, 창해 (Friedman, Thomas L., 2005, *The world is flat*, Allen Lane, London).
- 김숙진, 2006, “생태 환경 공간의 생산과 그 혼종성 (hybridity)에 대한 분석: 청계천 복원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2), 113-124.
-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5(4), 461-477.
- 김종철, 2008,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녹색평론서문집, 녹색평론사.
- 김지하, 1992, 생명, 숲.
- 김지하, 1996, 생명과 자치: 생명사상, 생명운동이란 무엇인가, 숲.
- 김철규 · 엄은희 · 오수길 · 윤순진 옮김, 2009, 생태논의의 최전선, 필맥, 서울(John Bellamy Foster, Brett Clark and Richard York et al., 2008, *Ecology: The moment of truth: an introduction*, Monthly Review Press).
- 김철규 · 이지웅, 2009, “4대강 사업과 팔당 유기농 공동체: 신진대사 균열론의 시각에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2), 43-67.
- 김현구 옮김, 2001,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현실문화연구, 서울(Foster, John Bellamy, 1999, *The Vulnerable Planet: A Short Economic History of the Environ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 김환석, 2006,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문학과 지성사.
- 니시베 마코토, 2002, “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65, 119-139.
- 마루야마 마코토, 1996, “경제순환과 지역화폐,” 녹색평론, 30, 50-72.
-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한살림.
- 문순홍 편, 2006a, 녹색국가의 탐색, 아르케.
- 문순홍 편, 2006b, 개발국가의 녹색성찰, 아르케.
- 문순홍, 2002a, “한국에서의 녹색국가 가능성, 그 논의의 문을 열며,” 바람과물연구소편,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당대, 5-9.
- 문순홍, 2002b, “녹색국가 논의의 구조와 과정: 녹색국가의 유형화·단계화 및 이를 결정하는 변수들,” 바람과물연구소편,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당대, 261-295.

- 문순홍, 2006a,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 문순홍, 2006b,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아르케.
- 문화/과학, 2008, 특집: 생태주의, 문화/과학, 56, 문화과학사.
- 바람과물연구소, 2002,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당대.
- 박미선 옮김, “역사적 시각에서 본 맑스의 생태학,” 포스터, 존 벨라미 저, 문화/과학, 56, 42-63.
- 박배균, 2009,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공간과 사회, 31, 49-87.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박종일·박선영 옮김, 2008, 벌거벗은 제국주의, 인간사랑(Foster, John Bellamy, *Naked Imperialism: America's Pursuit of Global Hegemony*, 2006, New York University Press).
- 박종일 옮김, 2010, 생태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인간사랑(Foster, John Bellamy, 2009, *The Ecological Revolution Making Peace With the Planet*, New York University Press).
- 박효진, 2012, 경계물로서의 쓰레기: 고물상들의 경험과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용식 옮김, 2009, 아나키즘, 개신(Pyotr A. Kropotkin, 2002, *Anarchism: A Collection of Revolutionary Writings*, Dover Publications).
- 서유석 옮김, 2012,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메이데이, 서울(Murray Bookchin, 2007, *Social ecology and Communalism*, AK Press).
- 송태욱 옮김, 2005,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넘기, 한길사, 파주(柄谷行人, 2010, *トランスクリティーク カントとマルクス*, 岩波現代文庫, 東京).
- 심하나, 2010,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에서 도롱뇽의 역할에 대한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은희, 2008, 환경의 신자유주의화와 제3세계 환경의 변화: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범상·김문기 옮김,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한울아카데미, 파주(Bob Jessop, 1991,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219-266.
- 윤종희·박상현, 2006, “마르크스주의와 생태론,”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공감, 9-94.
- 윤희숙 옮김, 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파주(Benedict Anderson, 1983,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London).
- 이근행, 2001,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과와 과제: 생태적 도시공동체운동의 가능성과 전망,” 도시연구, 7, 96-116.
- 이범웅 옮김, 2010,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 인간사랑(Foster, John Bellamy, 1999, *Marx's Ecology: Materialism and Nature*, Monthly Review Press).
- 이상헌, 2001, 물 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 분석: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권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헌, 2002, “자연의 지배에서 자연의 사회적 구성으로,” 최병두 외, 녹색전망, 도요새, 119-142.
- 이상헌, 2009, “MB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환경사회학연구 ECO, 13(2), 7-41.
- 이상헌, 2011, 생태주의, 책세상.
- 이세진 옮김, 2012,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인간과 자연, 과학과 정치에 관한 가장 도발적인 생각, 사월의책, 서울(Bruno Latour, 2010, *Cogitamus: Six lettres sur les humanites scientifiques*, La Découverte, Paris).
- 정규호, 2008, “생태적 (지역) 공동체운동의 의미와 역할 및 과제,” 경제와사회, 78, 57-82.
- 정승진 옮김, 2005, 지구환경정치학담론, 에코리브르, 서울(J. S. Dryzek,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Oxford University Press).
- 정용화 옮김, 1994,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서울(Andrew Dobson, 2000, *Green political thought: an introduction*, Psychology Press).
-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생명.
- 주은우, 2003, “19~20세기 전환기 자연 풍경과 미국의 국가 정체성,” 사회와 역사, 63, 123-160.
- 진종현, 2005,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분석: ‘관광객

- 의 시선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17(1), 31-46.
- 진중헌, 2007, “한국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 상징경관의 역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최 규장각 워크샵: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민족과 영토성 다시 읽기, 28-39.
- 진중헌, 2009, “경관연구의 환경론적 함의: 낭만주의 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1(1), 149-160.
-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국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 최병두, 2001, “생태정치와 정치생태학, 그리고 맑스주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 124-145.
- 최병두, 2009,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 5(1), 10-56.
- 최병두, 2010,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45(1), 26-48.
- 추선영 옮김,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Foster, John Bellamy, 2002, *Ecology Against Capitalism*, Monthly Review Press).
- 프레시안, 2009,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10월 16일자.
- 한면희, 2008, “한국 생태주의의 흐름과 현황,” 문화/과학, 56, 149-163.
- 홍민, 2011,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전망, 83, 47-78.
- 홍성욱 엮음,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서울.
- 홍성태,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생태사회의 전망, 한울.
- 홍철기 옮김,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대칭적 인류학을 위하여, 갈무리, 서울(Bruno Latour,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Nous navons jamais ete modernes)*, Harvard University Press).
- 황성원, 2010, 삼림의 신자유주의화, 그 갈등과 경합: 인도네시아 KFCP 사업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 옮김, 2012,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자본주의와 환경에 대한 안내서, 삼화(F. Magdoff, J. B. Foster, 2011, *What every environmentalist needs to know about capitalism: a citizen's guide to capitalism and the environment*, Monthly Review Press).
- 황진태, 2009, “서평: 생태사회주의는 불가능한 도전인가? 불가피한 대안인가?: 존 벨러미 포스터 외 9인 지음, 2009, 생태논의의 최전선, 김철규 외 3인 옮김, 필맥,”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313-323.
- 황진태, 2012a, “서평: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진 생태주의: 이상현, 2011, 생태주의, 책세상,” 공간과 사회, 39, 168-175.
- 황진태, 2012b,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노동자 자주관리 경험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40, 78-113.
- 황진태, 2013, “한국에서의 토건국가 논의,” 미즈오카 후지오 편저, 이동민 옮김, 세계화와 로컬리티의 경제와 사회. 논형, 317-320.
- Bakker, K., 2010, The limits of ‘neoliberal natures’: Debating green neoliber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6), 715-735.
- Brenner, N., & Theodore, N., Eds., 2002,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Blackwell, Oxford.
- Castree, N., 1995, The nature of produced nature: materiality and knowledge construction in Marxism, *Antipode*, 27(1), 12-48.
- Castree, N., 2008a,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131-152.
- Castree, N., 2008b, Neoliberalising nature: processes, effects, and evalu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153-173.
- Clark, B. and York, R., 2005, Dialectical Materialism and Nature An Alternative to Economism and Deep Ecology, *Organization & environment*, 18(3), 318-337.
- Eder, K., 1996,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 sociology of ecological enlightenment*, Sage, London.
- Foster, J. B., Clark, B. and York, R., 2009, The Midas effect: a critique of climate change economics, *Development and Change*, 40(6), 1085-1097.
- Hall, P. A. and Soskice, D. W.,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 Kythreotis, A. P., 2012, Progress in global climate change politics? Reasserting national state territoriality in a 'post-political' worl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4), 457-474.
- Mann, M., 2003,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s and results, in N. Brenner., B. Jessop., M. Jones. and MacLeod., G. (eds.), *State/space: A reader*, Blackwell Publishing, Malden, MA, 53-64.
- Ohmae, K., 1999,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HarperBusiness.
- Park, B. G., 2005,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and graduated sovereignty, Politics of neo-liberalism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Political Geography*, 24(7), 850-873.
- Robbins, P., 2008, The State in Political Ecology. A Postcard to Political Geography from the Field, in K. Cox., M. Low., and Robinson, J. (eds.), *The Sage Handbook of Political Geography*, Sage Publications, London, 205-218.
- Sack, R., 1986, *Human territoriality: The claiming of space*, Prentice Hall, London.
- Smith, N., 2006, Nature as accumulation strategy, in Pannitch, L., and Leys., C.(eds.), *Coming to terms with nature*, Merlin Press, London, 16-36.
- Swyngedouw, E., 2005, Dispossessing H2O: The contested terrain of water privatizat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6(1), 81-98.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Whitehead, M. Jones, R. A., and Jones, M. R., 2007, *The nature of the state: excavat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modern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Woo-Cummings, M., 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 York, R. and Rosa, E. A., 2003, Key challenges to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institutional efficacy, case study evidence, units of analysis, and the pace of eco-efficiency, *Organization & Environment*, 16(3), 273-288.
- York, R., Rosa, E. A. and Dietz, T., 2003, Footprints on the earth: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modern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9-300.
- 교신: 박배균,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eopbg@snu.ac.kr, 전화: 02-880-7721)
- Correspondence: Bae-Gyoon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8, Korea (e-mail: geopbg@snu.ac.kr, phone: +82-2-880-7721)

최초투고일 2013. 6. 7

수정일 2013. 6. 18

최종접수일 2013. 6. 21